

## 기본소득, 존재의 권리

최진석

문학평론가/〈뉴래디컬리뷰〉 편집위원

각종 선거철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도마에 오른다. 교실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자주 격론이 벌어지곤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소득을 일종의 생활 지원금 정도로 받아들이는 형편이다. 기본소득은 얼마나 주는가? 개인당 지급인가 가족당 지급인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 나아가 국가 전체의 부를 생각하며 기본소득의 과잉지출이 야기할 물가상승이나 실질임금의 하락을 걱정하는 말들도 나온다. 물론, 학생들 사이의 토론이니 정교한 경제학적 계산이나 논쟁으로 치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게 반갑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근거가 있는지 의혹에 빠지기도 한다. 주는 이유도, 받는 이유도 못 미덥기 때문일 게다. 기본소득을 왜 주는가? 이 질문에 대개 입을 다무는 것도 그래서일 듯싶다. 일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은퇴한 퇴직자도 아닌데 대체 왜 돈을 준다는 말인가?

교활한 정치가들의 생색내기용 공약이라는 주장도 있고, 복지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정책이라는 입장도 있다. 그렇지만 어느 쪽도 기본소득을 왜 주어야 하는지, 아니 국민이 기본소득을 왜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답하지 못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가? 아니, 어떤 근거로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아야 할까?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곰곰 되돌아보면, 이 두 질문 사이의 거리감, 그 차이야말로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듯싶다.

전자 즉 국가가 기본소득을 베푸는 생각에는 그 행위의 주체가 국가로 상정되어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안전과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인가? 물론 그도 총

분한 이유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라도 선진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 지표상의 순위가 추락한다면 기본소득은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나아가 기본소득 제공의 주체가 국가이고 국민은 수여의 객체라면, 그것은 일종의 시혜적이고 과시적인 관료적 사무가 되기 십상이다. 주는 대로 받고, 감사하면 되는 피동적 대상으로 국민이 전락하는 것이다. 그런 국민을 주권의 담지자라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후자에서 기본소득의 주체는 국민이다. 즉 국가가 주니까 감사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기에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럼 국민의 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국민이면 무조건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인가? 어떤 이유에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이유가 있다는 걸까? 핵심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소득의 근거를 노동에서 찾는다. 공장이든 회사든 생산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관념이 그것이다. 당연한 말이다.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노동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작동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국가는 노동을 국민의 권리라고 부른다. 이 같은 노동을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간주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가사도 노동이며, 비정규 알바생도 모두 정당한 노동자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다. 우리 시대에 노동의 범주는 훨씬 넓고 크다. 이 말은 명시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일하는 것만이 노동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가령 내가 편의점에 들러 콜라를 하나 샀다고 치자. 점원은 바코드 스캐너로 계산을 마친다. 이 장면에서 나는 한 명의 소비자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소비행위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편의점의 재고관리 시스템에 입력되고, 이는 다시 콜라 판매 전산망에 일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콜라의 생산과 유통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콜라 회사의 생산 시스템에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한 셈이다. 실상 한 사회에서 모든 소비활동은 그것의 실현과 동시에 생산에 포함되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에 속해 있다. 개인적인 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행위가 한 기업의 생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전체 생산에도 관련되어 있으며, 아마 세계 시장의 흐름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생산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에 머물지 않는다.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생존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쩌면 그의 존재 자체가 전체의 지속과 성장에 불가결한 요소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성싶다. 이러한 존재의 권리, 그

것을 구체적인 국가적 정책으로 표명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을 불쌍하게 여겨서 쥐어주는 시혜성 자금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존속과 번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의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즉 개인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인해 기본소득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주권자 없는 국가는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주권자의 생존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기본소득은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누려야 할 존재의 권리이다. 더 이상 우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국가가 있고, 국가는 국민이 생존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당차게 요구하고 떳떳하게 받아야 할 존재의 권리, 주권자의 몫인 셈이다.